

전략노트

Notes on Strategy

2021-15호

이중잣대의 국제정치학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중잣대의 국제정치학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시인 김춘수(1922~2004)를 대표하는 작품, ‘꽃’이라는 시가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이 작품 때문에 김춘수는 ‘꽃의 시인’으로 불렸다. 독자들은 ‘꽃’이라는 낱말의 상징이나 일상적 쓰임새와 관련 지으면서 이 시를 연시(戀詩)로 읽고 사랑해왔다. 소비되는 방식은 독자의 영역이므로 딱히 시비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인 자신을 포함, 많은 시문학 평론가들은 이 시를 ‘존재’와 ‘언어’, 그리고 언어를 통해 성립하는 ‘관계’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작품으로 해설한다.

이름을 짓고 부르는 일의 의미

이 세상의 사물과 현상에는 모두 이름들이 있다. 이름은 물질과 관념의 결합 방식이기도 하고, 현상의 속성에 대한 ‘규정’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이름의 틀 속으로 현상을 규격화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명명(命名)은 일종의 프레이밍(framing)이다. 현상의 복잡한 속성들을 간소화시키면서 특정한 단어의 프레이밍(규격) 속으로 가두는 결정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한다.’라면서 해석의 방식을 정해주는 일이다. 프레이밍을 ‘해석의 사전 설계’라고 간주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사회과학에서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지적 작업이 이와 유사하다.

사람의 일상에서도 그러하지만 역사 속에서도 이름,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예컨대 전쟁에 대한 명명이

그러하다. 전쟁의 이름 중에는 전쟁이 발발한 지역이나 공간과 연관 지어 이름이 붙기도 하고, 전쟁에 관계된 행위자 중심으로 명명된 것도 있다. ‘베트남전쟁’이나 ‘걸프전쟁’이 전자의 예라면, 후자는 ‘러일전쟁’이나 ‘미서전쟁’ 등이다. 또는 ‘아편전쟁’처럼 전쟁의 발발 원인이나 ‘6·25 사변’처럼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상징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것에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다. 같은 전쟁을 두고 각각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다만, 어떻게 명명하고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에 따라 인식과 해석 통로의 큰 골격이 정해진다는 것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발발 지역 중심으로 전쟁을 명명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종되어 버린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중잣대라는 논란

특정 무기의 시험 발사나 군사훈련을 ‘안보’와 ‘자위(自衛)’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도발’로 볼 것인가의 논란도 따지고 보면 ‘명명의 정치학’과 ‘해석의 주관성’에서 파생되는 문제다. 유사한 현상이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 다르게 각각 규정되고 명명되기 때문이다. 자위 조치와 도발 행위의 차이를 두고 ‘유사하기는 커녕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해석과 ‘결국 같은 것 아니냐’고 볼멘 항변을 하는 측이 생기는 것도 이름, 규정, 해석, 개념화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이중잣대라는 불만도 이런 배경에서 제기된다. 그런 항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기도 한다.

이중잣대(double standard)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이거나 분명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핵심은 판단의 ‘기준’이다. 기준점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일 때, 그리고 보편적이고 상식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공유되기 힘들 때 이중잣대 논란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내로남불’이 있다. 로맨스나 불륜이냐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정의 내리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국제정치다. 도발과 자위 조치의 대비도 그렇지만, 무력수단을 동원한 국가 행위를 두고도 한편에서는 침략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해방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심지어 식민지 지배를 두고도 피해자는 침탈이라고 규정하고 가해자는 시혜(施惠)였다고 뻔뻔스럽게 대응한다. 야만에 가까운 그런 이중성이 여태껏 용인되어왔던 영역이 국제정치다. 그 모호한 기준과 해석의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가 행위에 대한 ‘판단’의 보편 기준을 세우기는 여전히 어렵다. 20세기 이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대한 지구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국제정치영역에서 이러한 이중잣대 논란이 왜 수시로 등장하는가? 그것은 근대 국제정치의 본질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국제정치에서는 국내정치와는 달리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 권위체(central authority)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각자도생의 원리를 당연한 이치로 여기게 되고, 현상에 대한 독자적 해석 경향도 생기게 된다. 무정부성(anarchy)은 개체(개별 국가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현상에 대한 해석을 강제할 권위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다양한 방식의 이중 잣대가 횡행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국가 내의 도덕 기준으로는 ‘살인’으로 간주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국경 밖에서의 살인 행위는 전쟁 수행의 정당성으로 포장되면서 살인자는 되레 ‘전쟁영웅’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지구 온난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계 문제의 해결책에 합의했다가도 국내 기업 이익을 고려하여 비준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기기도 했다. 그런 국가들에 대해 비판이 쇄도하지만, 국익 추구라는 개체 중심 논리에 빠지면 대부분 국가들의 입장은 ‘오십보 백보’다. 인류 보편가치의 당위성과 국익추구 담론의 블랙홀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잣대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은 근대 국제정치의 양식이 지속하는 한 간단히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문명화의 진행 과정이 국가 간 영역에도 확산되고 정착하게 될 때까지 이중잣대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세력균형과 군비경쟁의 국제정치

도발이나 자위냐의 이중잣대 논란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군비경쟁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략 담론이나 시사적 수준에서 세력균형을 자주 거론한다. 사실, 힘의 균형적 배분에 대한 판단은 이중적이다. 안정의 조건이라고 보기도 하고 오히려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전제하기도 한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세력균형은 물질적 균형이 아니다. 국력 혹은 군사력이 국가들 간 관계에서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기는 계산조차 어렵다. 애초부터 국력과 군사력에는 무형적 요소 즉 인식적 요소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세력균형론도 생각과 판단, 관념의 논제다.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이 다소 앞섰다고 ‘판단’할 때,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세력균형에 도달했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르면 상대방 국가는 당연히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비경쟁은 물질적 균형, 혹은 불균형이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위협인식’에 대한 주관성의 조건 속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안보 딜레마와 군비경쟁은 세력균형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상대방의 판단과 규정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다. ‘도발이다 아니다’의 논쟁 때문에 전쟁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일정 수준까지의 자의적 해석과 규정은 사실상 인정될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가 원래 그런 곳이고, 다소의 야만적 속성이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위선(僞善) 또한 자연스럽다. 위선도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가장(假裝)하건 형식적 언사이건 선(善)을 앞세울 때 자의적 해석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자위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평화를 주창하는 것은 위선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전략이기도 하다. 외유내강의 원리가 이런 점에서는 최적의 전략이다.

이중잣대 논란에 대처하는 법

국가 간 관계에서 규정과 해석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은 설득력을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경론(競論)이다. 외교가 담론 경합의 장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다. 자신의 행위, 자국의 (자의적) 규정이 얼마나 더 설득력을 가지느냐가 관건이다. 경론의 다툼이 시작되면 이기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점잖고 의연하게 대응한답시고 위안부를 ‘전시성노예’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발적 매춘’이라고 부르는 뻔뻔한 행동을 허용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국제사회에서 자국 논리를 지지하고 호응하는 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론 다툼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공공외교가 중요한 이유도 그것이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행동과 논변이 보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지지할수록 정당성(legitimacy)을 가진다. 그런 토대 위에서 국제적 영향력(influence)이 증대된다. 거기에 더하여 국가가 축적해온 브랜드와 명성(reputation)도 영향을 미친다. 명성은 신뢰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타국과 공유한 이익 범위가 넓으면 논리와 관점도 공유하기 쉽다는 점이다. 정체성이 비슷하거나 우호적이어도 논리가 수렴한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규정도 비슷해진다. 요컨대 해석은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주관성의 영역이지만, 이익이나 정체성과 결부될 때 주관성과 주관성이 만나는 지점, 즉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영역이 넓어진다.

도발이나 자위 조치냐의 규정을 두고 제기된 이중잣대 논란은 근대 국제정치 속성상 딱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다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현상을 규정하는 일은 말싸움에만 그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규정과 해석의 차이를 두고 분노의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감정이 후속 행동으로 이어지면 하나의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른바 후과(後果)의 문제다. 규정의 자의성 때문에 빚어진 언술의 차이 때문에 서로 ‘옳다 그르다’의 담론 경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담론과 규정 때문에 갈등이 불필요하게 심화되는 상황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갈등관리는 현실적 문제다. 말싸움 때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는 법이다. 국제정치에서 상대방의 규정을 강제할 권리는 어느 누구도 없다. 그러나 각자도생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두면 갈등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군비경쟁이나 안보딜레마의 경우 처럼 불안감이 높아지고 위협인식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규정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을 극복하는 방도는 결국 교신과 대화가 답이다. 대화가 상호주관성 형성의 출발이고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동일한 언술 체계 속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논리 싸움할 이유는 없어진다. 신뢰도 쌓을 수 있게 된다. 개념, 해석, 규정, 단어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다시 김춘수의 아름다운 시구를 국제정치 영역으로 소환해본다. 꽃이라고 부르는 계기가 있어야 그는 꽃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 또한 나를 꽃이라고 부르면 그에게 나는 꽃이 되는 것이다. 꽃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상호관계와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주관성과 또 다른 주관성이 만나는 지점이다. 도발인가 자위적 조치인가의 논쟁은 이중잣대의 문제일지는 모르나 핵심은 관계 부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중잣대라고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고 관계를 맺으려 결심을 하게 되면 규정의 단어문제 따위는 더이상 논란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